

# 지역구 250+비례 50, 100% 연동형 부상

### 민주, 패트 처리 4+1 공조 모색... 선거제, 의원 정수 놓고 이전 지역구 축소 최소화 비례성 상승 효과... 5당 공감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위해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선거제 개혁안 부의가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석식으로 제1야당과의 협상 교착상태 해결이 요원하자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우선 모색하는 모양새다.

안 원안 통과를 바라는 입장이다.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의 부담에 '이탈표'가 나올 우려가 있다.

이에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운 저 법안

은 그대로 상정되면 부결된다"며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안은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까지도 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안 수정안 합의 도출과 함께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홍영표 의원이 참석한 '4+1 협의체' 준비 회동에서는 공수처법 관련 잠정 단일안을 이르면 시일 내에 마련해 찬

성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방안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중진의원 모임 등을 통해 당 내부 의견도 적극적으로 취합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 처리 강행보다는 여야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당 압박을 병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석성으로 한국당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직돼 향후 협상 과정의 난란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답답하고 격정된다"며 "단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황교안 단석 옛새째 옛새째 단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새로 설치된 단석 천막으로 이동하기 위해 25일 서울 중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원내 설치돼있던 천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모병제 논의 공식 착수

### 당내 특위 꾸리고 '공약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병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군 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특위에서 논의되겠지만, 가장 선 굵은 검토 안건은 모병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민주당통합 대선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두관 공동위원장은 이날 "미국도 6년 정도 준비를 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미래 안보를 위해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다. 특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인구절벽과 현대 과학전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모병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안보를 걱정해

야 한다"며 "군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모병제를 도입하고 복무기간을 늘려 첨단무기 운용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위에 전직 고위급 장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모병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난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고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들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모병제 도입을 두고 찬반 설왕설래가 이어졌으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는 당내 특위 설치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 보수진영에 창당바람

### 변혁, 연내 창당 못 박고 이언주·이정현 각자 신당 구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에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6일 보수 대통합을 제안한 지 20일 만에 무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쪼개지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내년 선거 지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가 통합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연내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다.

변혁은 전날 신당추진기획단 회의에서 내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창당 준비 작업을 개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바른미래당 출신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보수 4.0' 혹은 '자유 4.0' 등의 당명으로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 대표 출신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테크노크라트' (전문 관료)와 40대 이하 청년층이 중심이 된 신당을 이르면 내년 2월 중순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단 한국당이 시작한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변혁 소속의 한 의원은 "다들 한국당과 힘을 합쳐 건

전하고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은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한국당 보수대통합 추진단장인 내장민 의원은 "현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가 우선순위다. 황교안 대표가 단석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당 창당 바람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도 비교적 수월하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되며, 보수진영 주요 인사들이 통합보다는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통합의 큰 흐름을 앞두고 몸값을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소속 의원들이 미리 한국당과 통합해 공천 과정에서 고초를 겪느니, 신당을 만들어 자신만의 세력을 확보하고서 총선 직전 한국당과의 선거연대나 당내 통합 등을 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 29일 본회의 개최... 여야 원내대표 매일 회동

### 정기국회 일정 합의...문 의장 '패트 합의 안되면 절차대로 처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등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정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정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

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회동에서도 교섭단체 3당은 데이터3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각 당 이견이 돌출하면서 19일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일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

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으로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접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 의장은 "12월 2일 정부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들어있는 사안"이라며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김진표, 총리 유력설에

### "기다려 보는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유력 후보"라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이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총리에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기획을 만든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